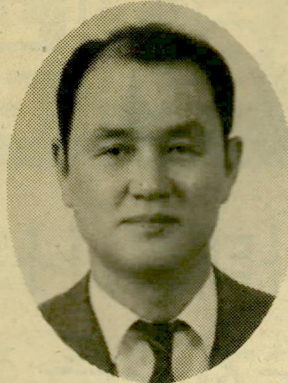


국방예산 논의의 기본과제 최 광

내년도 예산의 총체적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의 팽창예산 방침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간에 열띤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내년도 방위비 예산의 규모를 두고 예산당국과 국방부가 연례행사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방위예산의 증가율을 경제의 성장성장률 이내로 묶고자 하는 예산당국의 입장과 방위예산이 적어도 총체적 예산규모의 증가율만큼은 증대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대립되는 배경은 양자 모두의 경우에 경직성 경비가 예산운용에 가져오는 주름살 때문이다.

즉 예산당국의 경우 방위예산이 우리나라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경직성 성격의 방위예산을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복지과 사회간접자본 등 여타 부분의 예산증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로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현행 병력수준의 유지와 군의 전력증강사업의 특성상 계속성을 요구하는 경직성 성격이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입장이다.



방위예산의 총규모와 관련, 종전에 방위비가 국민총생산(GNP) 대비 일정비율로 연동되어 편성되던 방식에서 최근 실소요에 의거 편성되게 된 것은 매우 잘된 것이다. 관계당국이나 관련 이익집단은 방위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 '충분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기술개발·환경·교육 그리고 국방 등 모든 예산소요 분야에 '적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원분야간에 균형 내지 형평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들과 방위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압력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미적 입장에서가 결코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국내 주둔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 자신과 자본주의체제 전반의 방위를 위해서임을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비용에 의한 동북아 평화의 유지결과로서 대한민국도 혜택을 보지 않느냐고 강조하며 따라서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방위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국제적 공공재이므로 우리와 같은 약소국으로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가능한 한 무임승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어 각자의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보기 전에는 무임승차가 당연시될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군유지비 떠맡을 이유 없어

증액앞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국민복지 분야와 형평 맞추도록

해당부처의 판단 중 어느 입장이 옳으나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방위비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방안에는 가용 국방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운용의 효율화방안은 그 자체로서 꼭 필요한 것이며 가용재원 증대방안에 앞서 추진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차체에 방위예산과 관련한 몇가지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비와 관련한 정책과제 중 중요한 것은 첫째, 방위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어야 하는냐는 문제, 둘째 동북아시아의 방위 또는 자유진영의 방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냐는 문제, 셋째 방위예산 운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등이 꼽힌다.

우리경제의 가용자원 중 얼마만큼이 국방에 투입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논의와 관련, 일반적으로 망각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하는 방위예산의 규모가 우리경제가 부담하는 방위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방위예산 자체보다 훨씬 높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강제집행제도 아래서 사병(士兵)들은 '무료로' 방위의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은 그들이 대체적 고용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낮다. 민방위와 예비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자도 생산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GNP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온다. 이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조세지출(조세감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의 지방이전, 주한미군의 유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미국은 자신들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빌미로 우리나라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최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념을 같이하는 자유진영국

회원국들 사이에도 방위비는 강대국들이 주로 부담하며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나라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일본 서독 등 많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방위에 무임승차하는 한 우리 스스로가 무임승차의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방위비의 책정에서 엄격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 방위비의 내용 중 낭비적인 것이 없는가,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가, 방위비안의 각 항목간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가, 방위비 지출이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 적극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가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위예산 규모의 증가율을 한자리숫자로 하느냐, 전년도보다 높이느냐 또는 방위예산이 GNP나 총예산의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느냐 등의 시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과학적' 예산편성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방위예산의 총체적 규모와 그 내역을 평가해보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최대의 방위력은 국론통일이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론분열적 소모적 정치작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회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방위비의 예산 및 결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대 교수·경제학>



우리들 빠빠라기에게 남태평양의 추장은 말한다.

빠빠라기들은 매일 이성은 캐비닛에 넣고
감정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출근한다.

빠빠라기

정신세계사

3,500원/지금 서점에.../733-3135(대)